

과학벨트 물먹고 LH 뺏기고 ... 호남 '부글부글'

■ 광주, 과학벨트 선정 동의 못하는 이유

- ① 심사 끝나기도 전 선정설 ... 객관성 상실
- ② 부지 100만→ 50만평 축소 대전에 맞춤
- ③ 광주 유리한 '지반 안정성' 의도적 배제
- ④ MB 17일 대전 방문에 맞춰 발표 앞당겨

정부가 대전 대덕을 사실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무시한 정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오전 광주를 비롯한 후보지에 대한 최종심사를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13일 정부 핵심관계자의 '입'을 통해 '대전 대덕 선정설'이 사전제기되면서 심사의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애초 18일로 예정된 최종 입지 선정이 16일로 이를 앞당겨지는 등 우려했던 '짜맞추기식 심사'가 현실화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심사도 하기 전에 입지 선정=교육과학기술부는 거점지구의 경우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를 합산해 10개 후보지를 5개 후보지로 압축한 후 과학벨트 전체위원회에서

입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심사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1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는 밀봉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금고에 보관했다가 16일 오전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와 합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전에 입지가 대전 대덕으로 선정된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러한 심사과정이 모두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입지 사전 선정'은 선정의 핵심 기준인 정성평가를 정부 관계자가 과학벨트 전체위원회 개최 이전에 검토했거나 정성평가와 위원회의 판단을 아예 배제한 채 정부 입맛대로 입지를 선정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국가과학발전의 100년 대계인 과학벨트 입지를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채 결정한다면 이는 광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것"이

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 무상제공 제안 무시=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평동군 훈련장이 과학벨트 본원 입지로 선정될 경우 이 중 100만평을 광주시가 시비로 매입해 무상제공하겠다는 과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군 훈련장이 교통·부지 접근성·가격·개발 가능성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 국방부와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해 면적 656만4000㎡(2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뒤 이를 첫째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자신감을 과시했다. 부지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 대덕 사전선정설'이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과학벨트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최소 100만평 이상의 부지로 돼 있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50만평 이상 부지로 축소할 것도 이 같은 부지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지역을 입지로 하려는 징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이 과학벨트 후보지로 제시한 대덕지구의 면적은 61만평이다.

◇객관적 우수 광주, 의도적 배제=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과학벨트특별법 제9조에서 정한 5가지 입지요건 중 '연구 및 산업 시설의 집적도', '우수한 정주 환경', '국내외의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 4가지 요건은 세부평가지표를 만들어 점수화해 후보지별 우열을 가리도록 했다.

그러나 유독 광주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반 안정성'만은 여기서 제외하고 적정 여부만을 판단하면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광주를 배제하기 위해 불리하게 평가체계를 구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호남권유치위원회 공동의장은 "광주가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입지 기준에서 우수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과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원회는 15일 ▲애초 정해진 대로 16일 5개 후보지 선정 및 심사 후 이달 말에 최종후보지 발표 ▲최종후보지에 평동군 훈련장 이전 부지 포함 및 지반안정성 세부평가지표 작성 ▲5개 후보지 현지 실사 ▲입지 선정 전 해당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촉구했다.

/윤원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입지... 시론 거크 지시하

“좌시 않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정략적 심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김진의 호남권유치위원회 위원장,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대구·경북은 단식농성 하는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어디갔나

기자회견장 20명 중 김영진·강기정 2명만 참석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대전 내정설에 따라 호남권유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김영진, 강기정 의원 등 단 두 명만 참석했으며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은 호남권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

인 김영진 의원과 박주선 최고위원에 그쳤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원실 관계자 등도 전혀 보이지 않아 과학벨트 유치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광주시장 위원장은 "마침 광주에서 5·18 31주년 국민대회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김영록 전남도당 위원장은 "몇 주 전부터 잡힌 지역 일정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광주와 함께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는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정치권이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인기의원이 국회의원 회관 복도에서 과학벨트 본원 유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물론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회동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학벨트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총력을 다하는 판국에 소수야당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벨트 유치에 광주·전남 정치권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는 것

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당원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광히 과학벨트의 호남 유치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운 털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결집을 이끌 리더십 부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이날 기자회견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H 진주행 ... 민주당 "우릴 밟고가라"

청와대 앞 대규모 시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해 '경남·전북 분산배치'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LH 본사이전 방안을 청취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남·전북 분산배치안을 검토하던 정부가 자치단체와 협의하지도 않고

일괄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무효"라며 전체회의의 개의를 반대했다.

민주당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을 포함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시·도의원 등 400여명은 오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방침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다. 전북 분산배치를 고려하던 정부가

일괄 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된 경남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신공항 백지화로 경남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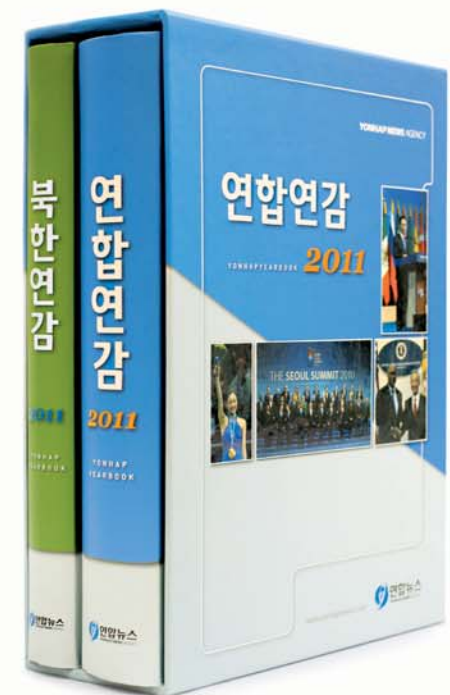
끝까지 '호남 흥대'는 앞졌지요?!

연합뉴스, '2011연합연감' 출간

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연감인 '연합연감' 2011년판이 출간됐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13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2010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특집으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EU FTA 공식 체결', '아이폰·갤럭시S 등 스마트폰 시대 본격화', '한국스포츠 잇단 패기' 등 중요한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분야별 뉴스와 현황을 정리했고, 2010년 이슈 100과 주요 연설 및 발표문, 화제의 인물, 미국·EU와 체결한 FTA 상세설명 자료,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지난 20년간 연합뉴스가 선정한 국내·국제 10대 뉴스도 수록했다.

별책 '북한연감'은 특집으로 3대 세습을 다룬 '김정은 후계체제 선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례적인 두 차례 중국 방문에 관한 '북·중 정상회담'을 실었고,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담았다.

특히 2011년판 연합연감은 독자의 지루함을 덜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과 그래픽, 도표, 통계 등을 다양하게 곁들여 시각적으로 향상된 편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연합뉴스의 최근 주요 발간서적



월간 Imagine
원간 이매진

국배판 발행판
총 220여쪽 내외
정가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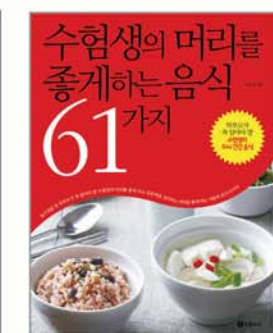
여행 레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국내의 여행제휴 및 정보, 레저 가이드, 리빙 트렌드, 건강 정보 등의 콘텐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단행본 도시탈출! 귀농으로 역대 연봉벌기

정창규의 지음
신국판 / 320쪽
정가 12,000원

'인생 2막을 위한 필수 지침서' 최근 줄을 잇는 귀농행렬은 어디서 연구했는가? 성공한 이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으로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정전, 한인들이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외국의 농업과 농민 문제도 점검했다. 농민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모두에게 매우 유용하며 '초보 농군을 위한 귀농 가이드'를 수록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책이다.



단행본 수험생의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 61가지

박건영 지음
190x245 / 220쪽
정가 14,000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수험생의 두뇌 건강 음식' 명석한 두뇌는 어떤 생활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뿐 아니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크게 좌우된다. 책에 소개된 음식들은 쉬운 조리법과 저자의 해박한 영양학적 지식이 반영돼 수험생들의 입맛을 돋우고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최상의 조합이며, 전문적과 사무직, 노인의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단행본 마음을 비기는 한국인 음식 54가지

대한임예병학회(박건영 외) 지음
신국판 / 266쪽
정가 12,000원

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약학, 영양학, 독성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7명과 (주)물무민, (주)이름 등 국내 식품업체 연구원 3명이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인의 먹거리리를 선정, 소개한 책으로 '임은 20세'에 이어 21세(7)에도 사랑을 197라며 '임예병'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최상의 조합이며, 전문적과 사무직, 노인의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 4x6배판, 양장본, 1천664쪽, 가격 180,000원
■ 구입문의 서울 02-398-3590~3, 경기 031-238-2222, 부산 051-441-7400, 경남 055-281-0010, 대구 053-355-3800
인천 032-427-1236, 대전·충남 042-521-9705, 광주 062-264-0064, 충청 043-225-5005, 전주 063-232-7652

